



주간통일정세 2014-14(2014.03.31~04.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4-14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核 병진노선 거듭 천명…"美 압력에 굴복 안해"**(3/31,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31일 1면에 작년 3월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병진노선을 채택한 지 1년을 기념한 '당의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사실을 게재함.
  - 사설은 "지난 1년은 우리의 핵보유를 코에 건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대결광증과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초긴장한 정세가 지속된 나날"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병진노선을 생명선으로 꺾듯이 틀어쥐고 자주적 길로 꺾듯이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 "적들은 우리의 병진노선에 대하여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방했다"며 "그러나 병진노선이 법화된 때로부터 우리는 확고한 군사적 담보에 의거하여 경제 건설에 더 많은 인적, 물적 잠재력을 돌리고 배심있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반박함.
  
- **北, '최대 명절' 김일성 생일 축제 분위기 띄우기**(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면 사설에서 4월이 "뜻 깊은 달"이라며 모든 주민들이 4월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4월은 태양절뿐 아니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9일), 김정일의 당 제1비서 추대(11일)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13일) 기념일 등이 있어 "혁명적 경사들이 겹친 달"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라고 칭송함.
  - 노동신문은 같은 날 2면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평양의 '만경대 고향집'에 관한 글을 사진과 함께 게재해 김 주석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킴.
  - 신문은 "해마다 4월에 들어서면 만경대를 찾는 참관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난다"며 "위대한 주체 조선의 100년사에 우리 인민이 맞이한 모든 영광과 자랑찬 승리들이 만경대 고향집의 사립문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현 정세 엄중…美적대정책 깃부셔버릴 것"**(4/2, 조선중앙방송)
  - 김 제1위원장은 이달 1일 양강도 삼지연 대기념비에서 열린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갈



염원으로부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했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흥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밝힘.
- 결의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대거 참석함.
- 중앙통신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군 장병들과 함께 양강도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으나, 공연관람 날짜를 밝히지 않음.

#### ● 北 사회단체 잇달아 전원회의…'사상공세' 다짐(4/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앙위원회 제6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하며 "회의에서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농근맹 조직들의 과업에 대해 토의했다"고 3일 전함.
- 3일 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 제6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도 평양에서 열렸으며 전날인 1일에는 직업총동맹(직맹) 중앙위 제7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제5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각각 열림.

#### ● 北 상업상에 김경남 임명…대의원 선거 전 교체된 듯(4/5,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5일 제19차 '태양절'(김일성 생일) 경축 요리축전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열렸다고 하며 폐막식에 김용진 내각 부총리와 김경남 상업상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또한 방송은 요리축전 폐막식 참석자를 호명하면서 인민봉사총국장을 김미옥으로 소개함.

#### ● 北 김정은, 축구경기 관람…'체육에 대한 관심 높여야'(4/6,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과 남자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하지만 통신은 축구경기가 언제 열렸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음.
- 이날 축구경기 관람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오금철·노광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정치위원, 윤정린 호위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태성·김승연 당 부부장 등이 함께함.

■ 김정은 동향

- 4/1,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3.23~)에 참가한 軍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현지에서 만나(4.1, 삼지연비행장 도착) 고무 격려(4.2,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운동현, 리병철, 김영철, 박정천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장병들과 함께 양강도 순회공연 예정인 모란봉악단의 공연 관람(4.2,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김명식, 박태수, 김영철, 조경철, 한광상이 함께 관람
- 김정은 黨 제1비서, 갈매기팀 對 제비팀의 남자축구 경기(제비팀이 4:2로 승리) 관람(4.6,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수길, 오금철, 노광철, 조경철, 리병철, 김명식, 장동운, 윤정린, 한광상, 황병서, 리재일, 박태성, 김승연이 함께 관람
-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 운전기재 전달(4.5, 평양방송)
  - 전달모임, 4월 4일 한광복(당중앙위 부장)·장철(국가과학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의 병진노선 제시(3.31) 1주년 관련 지난 1년간 '경제건설 전진,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자주적 존엄과 안전 수호' 등 "정당성과 생활력 과시" 自評 및 "최후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 (3.31, 중앙통신·노동신문)

김일성父子에 대해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절세의 애국자' 라고 업적을 칭송하며 '제8차 사상일꾼대회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당의 영도 따라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고 호소(4.1, 중앙통신·노동신문)

「직총」 중앙위 제7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월 1일 현상주(「직총」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1, 중앙통신)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연안군·청단군·배천군 內 협동농장들의 영농실태를 현지요해(4.2, 중앙통신·평양방송)

·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며 선진영농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 목표 달성을 강조

「농근맹」 중앙위 제6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월 2일 리명길(「농근맹」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2, 중앙통신)

김정은 명령에 따른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행군' 진행(3.23~4.1)은 "혁명선열들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선전(4.3, 중앙방송·중앙통신)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그 자체가 최고의 경제건설"이라고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진리성" 강조와 "우리의 병진노선은 억척불변"이라고 지속 천명(4.3, 중앙통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4.3 원화협동농장(평안남도 평원군)에서 리명길(「농근맹」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13)' 21주년 즈음 시·노래모임 진행(4.3, 중앙통신·평양방송)

'제국주의의 반혁명적 공세가 강화될수록 굳건해지는 견결한 투쟁정신이 우리 인민의 계급의식'이라며 '투철한 계급적 자각이야말로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공고한 정신적 기둥'이라고 강조(4.4, 중앙통신·노동신문)

김정은 저작 발표(4.6) 2주년 즈음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혁명 사상과 영도업적을 계승하여 반미대결전 승리, 핵보유 등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영도 찬양(4.6, 중앙통신·노동신문)



## 나. 경제

- **유엔, 긴급구호기금 650만 달러 北에 지원(4/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북한 식량·보건 지원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650만 달러(약 69억원)를 투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OCHA는 지난 2월 세계식량계획(WFP)에 325만 달러(약 34억5천만원), 세계보건기구(WHO)에 100만 달러(약 10억6천만원)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 식량농업기구(FAO)에 10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에 25만 달러(약 2억7천만원)를 전달하는 등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 북한 지원 사업에 모두 65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투입함.
  - OCHA 뉴욕본부 대변인은 "모금 부진으로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구들에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며 "식량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분야에 쓰일 것"이라고 말함.
  
- **中 투먼-北 칠보산 관광열차 내달 2일 운행 재개 (4/1, 자유아시아방송(RFA);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서 출발해 칠보산 등 북한 함경북도 일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중국인 대상 열차관광이 내달 2일 재개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현지 신문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2011년 시작된 투먼~칠보산 열차관광은 칠보산, 청진시, 경성 온천 등을 순회하는 5일 관광 코스이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찾아오는 함경북도의 기후 특성상 관광열차 운행은 매년 10월에 중단됐다가 이듬해 봄 재개됨.
  - 또한 투먼시는 열차관광 외에 버스로 함북 온성군 일대를 둘러보는 1일 관광과 투먼에서 걸어서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가는 '남양 보행관광' 등 북중 접경지역 관광상품들을 운영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무역상, 방북 몽골 공업·농업장관과 회담(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리룡남 무역상과 방북 중인 할트마긴 바트툴가 몽골 공업·농업장관 간 회담이 1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북)-몽 정부 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조선측 위원장인 리룡남 무역상과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마긴 바트툴가 공업 및 농업상의 회담이 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밝힘.
  - 이어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함.
  
- **北 김영남, 방북 몽골 공업·농업장관과 면담(4/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2일 방북 중인 할트마





긴 바트톨가 몽골 공업·농업장관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 추진(4/2,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몽골이 2일 '조선·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과 황민 농업성 부상, 몽골측에서 할트마긴 바트톨가 공업·농업장관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북한 주재 대사가 참석함.
- 한편 양측은 북한 무역성과 몽골 노동부 사이의 양해문에도 조인함.

● **"캐나다, WFP 통해 270만 달러 대북 지원"(4/2, 미국의소리(VOA))**

- 캐나다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에 270만 달러(약 28억5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함.
- 디르크 슈테젠 WFP 평양사무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가 기부한 자금으로 영양식품을 만드는 밀가루와 옥수수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슈테젠 소장은 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배정한 긴급지원금 325만 달러(약 34억3천만원)가 지난달 WFP에 전달됐다고 밝힘.

● **조선신보 "北, 작년 3월 생산단위 '독자경영제' 도입"(4/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조선(북한)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작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생산 단위가 경영 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여나가고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함.
- 이어 독자 경영체제 도입은 "국가 계획을 벗어난 생산을 자체의 결심으로 조직하고 판매하며 종업원들의 보수, 복리후생 등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 조선신보는 독자 경영체제 도입 이후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일부 생산 단위들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생산 열의가 높아지면서 생산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소개함.
- 조선신보에 따르면 "앞선 단위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손꼽히는 단위"인 평양326전선공장은 지난해 생산량이 2012년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음.

● **"FAO, 北 구제역 방역에 40만 달러 지원"(4/3,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구제역 방역을 위해 40만 달러(약 4억 2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후안 루브로스 FAO 수의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구제역 감염검사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북한에 구제역 방역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설명함.

● **北 노동신문 "식량 증산 위해 곡물재배지 늘려야"(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1면에 실은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려 올해 알곡 고지 점령에 이바지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알곡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알곡재배면적을 늘려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밝힘.
- 신문은 국토의 80%가 산림이고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적은 북한의 조건과 잇따르는 자연재해 등으로 경작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무엇보다도 벼와 옥수수 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함.
- 이어 경작지 확대를 위해 간석지 농사 대책을 세우고 임농(林農)복합경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논과 밭 가운데 있는 건물을 산기슭에 옮기고 불필요한 농로와 물길, 양수장 등을 없애고 논이나 밭으로 재정리해야 한다고 독려함.

● **北, '국산품 소비'에 안간힘... "제품 질 높아자"(4/2; 4/4,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강서약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수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다"며 강서약수의 맛과 질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주장함.
- 또 중앙통신은 2일 강서편직공장이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질을 높였으며 운동복 등 의류 제품이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상점에서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소개함.
- 지난 2일자 조선신보는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라는 글에서 평양326전선공장을 독자경영체제의 모범사례로 꼽으며 "이 공장 노동자들의 지향은 제품의 질을 계속 높여 사람들이 외국제품이 아니라 전선공장의 제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함.

● **北 경제간부들, 中서 경제특구·농촌개발 학습(4/6, 심천특구보)**

- 6일 심천특구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경제부 리호선 부부장과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진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경제간부 시찰단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광둥성 선전(深천<土+川>),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텐진(天津)직할시를 차례로 방문함.
- 리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경제시찰단은 지난달 28일 첫 방문지인 선전에서 시(市) 공산당위원회 장후(張虎) 조직부장 등으로부터 경제특구 개발 성공 경험을 집중적으로 전수함.
- 리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 여러 지역에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내놨고 관련 법률과 법규를 마련하는 중"이라며 "이번 선전 방문의 목적은 중국의 경제특구 발전 경험을 배우고 참고해 조선(북한)





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얻고 조선이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의 길로 나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함.

- 시찰단은 산시성 빈(彬)현의 여러 마을을 직접 방문해 농촌 치수사업과 강변 경관녹화사업 등 중국식 농촌 개발 모델을 배우고 도시계획, 도시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노하우도 꼼꼼히 살폈으며, 리 부부장은 농촌 견학을 마친 뒤 중국의 신농촌 건설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의 좋은 경험과 방식을 갖고 돌아가 우리의 실정과 결합해 신농촌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북한 시찰단은 이어 중국의 국가급 개발구인 텐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를 방문해 빈하이신구 공산당위원회 위안통리(袁桐利) 서기 등 중국 간부들로부터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음.

■ 기타 (대내 경제)

- 강서편직공장에서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생산에 도입한 기술혁신안은 20여 건이나 된다'고 선전(4.2,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한 "고성능 먼적외선 복사체(복사율 90% 이상, 각종 편직물들의 열처리공정 등 도입)의 의료기구 제작에 도입 등 "경제적 실리가 크다"고 선전(4.3,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하고 '구장시멘트공장'을 찾아 발전소건설장에 요구되는 시멘트를 보장해줄 데 대해 강조(4.4, 중앙통신·중앙방송)

다. 군사

- **北, 평양 미림비행장서 대규모 화력시범 준비 중**(3/31, 연합뉴스)
  -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군이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화력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31일 "미림비행장에 병력과 포병화기가 집결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방사포와 견인포 등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북한군은 화력시범에 이어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FEB)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상륙훈련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北, 軍지휘관 백두산 답사 부각... "혁명완수 계기"**(4/3,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3일 북한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1면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읽고 이번 행군을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함.

- **北 군인들, 서해 최전방서 '어선 나포 복수' 결의(4/5, 노동신문)**
  - 북한 군인들이 4일 연평도 인근의 서해 최전방 지역에서 결의모임을 갖고 우리 군이 지난달 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비난하며 '복수결의문'도 낭독하는 등 '복수'를 다짐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함.
  - 신문은 5일 1면에 "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들이 우리 선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용서치 않고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인민군 군인들의 복수결의모임이 4일 연평도가 지척에 비라보이는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열렸다"고 전함.

#### 라. 사회·문화

- **北 모란봉악단, 평양서 지방으로...양강도 공연 시작(4/2,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모란봉악단의 평양 공연을 관람하고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며 양강도에서 첫 지방 공연을 위한 과업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노동신문도 2일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음악 포성' 제목의 기사에서 "모란봉악단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특별히 사랑하는 예술단체이며 모란봉악단 공연은 누구나 기다리는 공연"이라고 소개함.
  -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온 나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모란봉악단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힘.
- **평양 만경대상 마라톤 외국인 관광객에도 개방(4/3, 영국데일리메일)**
  - 4월 13일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대회'에 처음으로 아마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가 허용됐다고 미국 AP통신과 영국 데일리메일이 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대회는 지난 1981년 북한 당국이 당시 김일성 주석의 69회 생일(4월 15일)을 기념해 시작한 행사로 지금까지는 소수의 세계적 프로 마라톤러들만 뛸 수 있었으나, 이번 대회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함.



- **국제적십자자연맹, 北에 나무 64만 그루 지원(4/4,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북한에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IFRC는 여름철 홍수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평안남도 운산군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 산간에 나무를 심고 있으며, 이를 위해 64만4천 그루의 묘목을 지원했고 수종은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소나무, 포플러 등으로 알려짐.
  
- **"평양서 신형 스마트폰 '평양타치' 인기"(4/4, 조선신보; 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평양 자호(이름)의 새 형 타치(터치)식 손전화가 평양 시민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며 "일명 '평양타치'로 불리는 새 형의 손전화기는 다양한 색깔과 깨끗한 외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4일 소개함.
  - 한편 북한 체신성이 지난 2008년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북한 주민들 속에서 휴대전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소 구제역 발병 공식 통보(4/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돼지 구제역에 이어 소 구제역의 추가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2일 리경근 농업성 수의방역국장 명의로 OI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14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 52마리 가운데 9마리가 구제역에 걸려 그중 1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힘.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우주개발법」 채택('13.4.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이후 지난 1년간 "국가우주개발국 마크 제정" 등 '국가우주개발국의 우주개발사업 추진 성과' 및 「우주개발법」 해설 소개(3.3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4월1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및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고 소개(4.1, 중앙통신·중앙방송)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4월 1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1, 중앙통신)
  - 김기남(黨 비서), 김용진(내각 부총리, 개막사), 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
- 평양시 요리축전,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맞으며 봉화산여관에서 진행(4.1, 중앙통신)
-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즈음한 '봄철 청소년 적십자 나무심기 행사'(4.2~13), 4월 2일 평안남도 은산군에서 진행(4.2, 중앙통신·평양방송)
- 만경대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태권도, 바둑, 우슈 등) 개막식, 4.3 태권도전당에서 최태복(黨 비서)·리영수(黨 부장)·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장/개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4.3,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모란봉악단, 4월 4일 15시 삼지연문화회관에서 첫 양강도 순회공연 진행(4.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9차 태양절요리축전, 4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진행(4.4, 중앙통신)
- 천도교 창도 154주년 '천일기념식', 4월 5일 윤정호(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부위원장/기념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5, 중앙통신)
- 모란봉악단(양강도 순회공연 中), 4.6 대흥단군에서 첫 공연(郡 문화회관) 진행(4.6, 중앙방송·중앙통신)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北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적대정책 산물"(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정치협잡꾼들의 집단인 조사위원회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채택된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면 반대, 배격한다"고 말함.

● **北통신 "美, '北위협' 부각해 긴장 격화 분위기 조성"(3/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을 부각한 데 대해 "저들의 대조선(대북)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고 기어이 현실화해보려는 추악한 흥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함.
- 3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저들의 이 침략적인 대조선 정책 실행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평화변영 정책과 실행 노력을 비롯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사사건건 '도발'과 '위협'으로 무작정 걸고 들면서 긴장 격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중국, 한반도 긴장고조에 '냉정·절제' 촉구(3/31,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고 한국이 대응사격에 나서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냉정과 절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온도가 다소 올라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 **北日 정부협상서 납치 재조사·제재 완화 요구(3/31,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의 공식 협상에 일본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1일 이틀간에 걸친 회담을 끝내고 나서 납치문제를 앞으로 의제로 다루기로 쌍방이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전함.
- 이하라 국장은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심협도 배척하지 않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속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26일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준수하라고 요구함.

● **北 송일호 "총련회관 해결없는 북일관계 진전없다"(4/1, 연합뉴스)**

-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1일 일본에서 강제 매각 판결이 내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회관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조일





(북일) 관계 진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송 대사는 "장시간에 걸친 회담은 1년 4개월 만에 몽골에서 중단된 이후 열렸다"면서 "많은 문제들,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매우 폭넓게 진행됐다"고 평가함.

● **北 통신 "일본은 핵무기 보유할 어떤 명분도 없다"(4/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조선 핵위협론으로 핵무장화 책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초점을 맞춰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그 어떤 이유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 통신은 "오늘날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자면 나라의 안전과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은 납득이 될만한 정치·군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에 있고, 더욱이 일본과 핵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역설함.

● **美일리노이 주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4/4, 연합뉴스)**

-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일리노이 주상원의원(민주)은 3일(현지시간) 한미 우호네트워크(회장 진안순)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하원을 거쳐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이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실태를 고발하면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확립과 탈북자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연방의회 일리노이주 의원들, 일리노이 인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로켓 발사는 자위권...부정하면 美 위태롭게 돼"(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둬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군사조치를 계속 부정하려 들다가는 미국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위협함.
- 신문은 4일 '자위권 행사를 짓밟으려는 미제에게 천백 배의 징벌을 안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의 더욱더 노골화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하여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는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도 정당방위 권리를 모든 수단을 다하여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함.



- **美의회조사국 "대북 식량지원, 韓美 정책조화 필요"(4/5, 연합뉴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4일(현지시간)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접근이 항상 조화로왔던 것은 아니다"라며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원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한국과 중국의 조건없는 대규모 지원에 의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 오늘 방한(4/5,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저녁 방한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킹 특사는 10일까지 우리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인사,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및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대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신문 "총련회관 강탈은 북일관계 파국 시한탄"(4/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법치의 간판 밑에 벌어진 강탈사기극'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총련 중앙회관이 외교관계가 없는 양국 사이에서 수십 년간 북한 '해외대표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일본 당국이 진실로 조(북)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조일관계의 운명을 망쳐놓을 수 있는 현 사태 앞에서 심사숙고해야 하며 총련회관 강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신문은 "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이런 망동을 부리는 것은 단순히 그들 특유의 표리부동성의 발로로만 볼 수 없다"며 "조일관계 문제에서 총련회관 문제를 공화국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간특한(교활한) 기도(시도)가 깔렸다"고 주장함.



#### ■ 기타 (대외 일반)

- 美 오바마 대통령 주도의 韓美日 정상회담(3.25, 헤이그) 개최(북핵 대응 등)에 대해 "3각 군사동맹 강화책동"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 안전을 위협하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부정적 후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3.31, 중앙통신 · 노동신문)

유엔 안보리의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에 대해 "그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격화와 충돌만 불러오게 된다"며 '우리(北)의 훈련은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게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반발(3.31, 평양방송)

일본 집권세력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 움직임 및 무력공격사태법 등 10여개의 기존법 개정 결정 등 목적'은 "침략의 길을 또다시 걷자는 데 있다"고 우려(3.31, 평양방송)

멕시코 노동당 전국지도자(알베르토 아나야 구띠에레스), 3.26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안근성 멕시코 주재 北 대사,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 정당들의 제18차 토론회 참가) 면담(3.31, 중앙방송 · 중앙통신)

김영남, 4월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 駐北 아일랜드공화국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대사와 담화(4.1, 중앙통신 · 평양방송)

리룡남(무역상), 4월 1일 평양에서 몽골 공업 및 농업상과 회담(4.1, 중앙통신 · 중앙방송)

駐北 러시아대사관 일행, 4월 1일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돌 즈음 남포종합식료공장 · 대안친선유리공장 등 여러 곳 참관(4.1, 중앙통신)

일제의 성노예범죄 진상을 폭로하는 미군문서들 공개 관련 '과거 범죄를 왜곡 · 부정하고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국주의화 · 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의 발로'라며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의 극치이며 사무라이적 근성'이라고 비난(4.1, 중앙통신 · 노동신문 ·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방위성 전략기획국 부국장의 對北발언(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등) 관련 '독자적인 핵무장화의 구실을 마련해 보려는 기도'라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무장화를 정당화하여 우리(北)에 대한 핵선제공격도 무난히 치르자는 속심'이라고 비난(4.1, 중앙통신)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 등에 한국전 당시 가져간 문화재 반환을 주장하는 글들 게재 관련 미국은 '조선봉건왕조의 옥새뿐 아니라 문화재약탈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문화유산들을 반환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4.1, 중앙통신 · 민주조선)

北-러시아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에 즈음한 친선연환모임, 4월 2일 김진범(대외문화연락회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北-러시아 친선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진행(4.2, 중앙통신)



미국의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발사시험 계획에 대해 "군사적 우위에 의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무모한 기도"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4.3, 중앙통신 · 노동신문 · 평양방송)

러시아연방 공산당 연해주위원회 대표단, 4.3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만경대 방문과 당창건사적관 · 주체사상탑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 메아리사적관 참관 등 訪北 동정 보도(4.3, 중앙통신 · 중앙방송)

미국의 '北 미사일 위협 대비 MD 강화 계획(美 의회, 2019년까지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총 370억US\$ 논의 등)'을 '亞-태중시 전략에 따른 무력증강 책동의 합리화 목적'이라며 '對北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 중단 주장(4.6, 중앙통신 · 노동신문 · 평양방송)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3.30), 4.3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 - 2014237 호'로 배포(4.6, 중앙방송 · 평양방송)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어선 나포' 연일 비난... "백령도를 잿가루로" (3/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천인공노할 깡패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남측을 비난하는 각계각층의 격앙된 목소리를 전함.
  - 이들은 한국 해군이 북한 측 수역을 불법 침입한 뒤 선원들을 강제로 납치해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지난 28일 주장을 되풀이하며 "해적소굴 백령도를 잿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매국역적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 등 적개심에 찬 발언을 쏟아냄.
- **北, '서해NLL 인접 북쪽지역 7곳서 오늘 해상사격' 통보(3/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7개 지역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은 이날 "북한이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오늘 오전 8시께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오늘 중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통보한 해상사격구역은 백령도 NLL 북쪽에서 연평도 북쪽 대수압도 인근까지 7개 구역"이라고 말함.
- **국방부 "北, NLL 사격훈련 통보는 적대적 의도" (3/31, 연합뉴스)**
  - 국방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7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우리를 위



협하려는 적대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NLL 인근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통해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도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이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함.

#### ● 北 포탄 100여발 NLL 이남 낙하...軍 300여발 대응사격(3/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서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했고 이중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오늘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힘.
-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이 계획된 도발이며, 남북 관계에 주도권을 갖고 NLL에 대한 우리 군의 수호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대응사격을 발미로 해서 우리 도서와 해역에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함.

#### ● 北, '드레스덴 선언' 연일 비난..."허위·기만의 극치"(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입부리를 놀리려면 제코부터 씻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는 체면도 없이 독일통일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느니, '모범'을 따르고 싶다느니 하며 이양을 떨었는가 하면 '연설'이랍시고 뭐니 하면서 희뽀게(거만하게) 놀아댔다"고 주장함.
- 또한 "사실 박근혜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라며 "그런 흉악한 속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으니 그야말로 낮가죽이 두꺼워도 보통 두껍지 않다"고 비난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남북교류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은 각 계층의 북남 민간교류와 내왕(왕래)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섰으며 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뚝뚝 올리는 것마저 외면해왔다"며 "이제와서 '공동번영'이니, '동질성 회복'이니 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와 기만의 극치"라고 지적함.

#### ● 정부 "北, 시정잡배도 꺼릴 표현 써...비상식 행태"(4/1, 연합뉴스)

-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 대한 북한의 연일 거친 비난과 관련,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 활동





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신문, '드레스덴 선언' 거듭 비난…"체제통일 시도"(4/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핵포기 망상, 체제대결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달 네덜란드, 독일 방문에 대해 "범죄적인 반통일 대결행각"이라고 주장함.
  - 특히 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박근혜가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무슨 통일시대를 열어나간다고 입방아질한 것은 '체제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대화냐 파국이나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외세와 마주앉아 '단합된 대응'이니, '공조 재확인'이니 하며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박근혜에게 과연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짐.
  
- **국방부 "과주 추락 무인기 사진 193장 촬영"(4/3,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과주 추락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찍은 영상, 특히 서울을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대변인은 "기준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추세였고, 우리들이 이미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차에 발생한 일이다.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고 밝힘.
  
- **백령도 추락 北무인기 소청도·대청도도 정찰비행(4/3, 연합뉴스)**

  - 백령도에서 지난달 31일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한 뒤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까지 날아왔다가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 무인기는 추정컨데 북한에서 (발진해)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에서 추락했다"면서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왔다갔다하면서 사진촬영을 했다. 'S'자로 섬 전체를 훑으면서 지나갔다"고 밝힘.
  
- **北, 대남 비난 지속…"대결의 길 목과하지 않을 것"(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북남관계는 대결정책의 농락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관련 발언과 드레스덴 대북 제안, 한미 연합 연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이 같이 주장함.

- 신문은 또 최근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비난한 북한의 행태를 정부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옳은 소리 몇 마디 한 것을 놓고 바작바작 신경질을 부리며 우리를 걸고 드는 것은 북남관계에 또 다른 해가 된다"라고 주장함.

● **北, 南 미사일 발사 비난... "우리 비난 체면 없을 것" (4/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략군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신문사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남조선 괴뢰는 이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와 같은 자위권 행사에 대해 더이상 쫓겨달(떠들어달) 체면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도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 강화 조치에 대해 함부로 걸고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이 비공개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서남전선 열점수역(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진행된 포병 해상사격훈련과 무인기사건으로 불판 위에 오른 괴뢰당국이 사태 수습 방도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소행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난데없는 무인기사건까지 발생하여 가뜩이나 땅바닥으로 떨어진 괴뢰들의 체면을 더 구겨 박아놓았다"고 지적함.

● **북한계 추정 무인기, 강원 삼척 야산서도 발견(4/6, 연합뉴스)**

- 국방부는 6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청옥산 줄기의 한 야산(고도 1천40여m) 중턱 940m 지점에서 추락한 무인기 1대를 발견했다"면서 "발견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도 북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5·24조치 틀 내에서 北민생인프라 단계적추진" (3/31, 연합뉴스)**

- 통일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 중 민생 인프라 지원 문제와 관련, "5·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도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고 밝힘.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생 인프라 지원과 5·24 대북 제재조치의 상충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구축 입안이 안 됐지만 5·24 조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함.



- **北, 식량차관 3차 상환금도 연체...정부 상환 촉구(4/2,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3차 상환금도 만기인 지난달 31일까지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1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상환 촉구 통지문을 보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 북한이 이번에 갚아야 할 3차 상환 원리금은 700만 달러이며,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만기가 도래한 식량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포함하면 북한의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은 1천800만 달러 규모로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정부는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천4만 달러 어치의 식량을 지원함.
  
- **北 "우리 선원 승선 배 침몰...유관 측 협력 바람"(4/5, 조선중앙통신)**
  - 5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새벽 우리 국가해사감독국 아래 근해회사 선원들이 승선한 몽골 국적 무역 짐배(화물선) '그랜드포춘1호'가 중국 상해로 가던 도중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번 사고를 공식 확인함.
  - 통신은 이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배에 탔던 우리 선원 16명 중 2명은 사망하고 3명이 구조됐으며 11명은 행불(행방불명)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우리는 유관 측들이 국제적 관례에 부합되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생존 선원들이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함.
  
- **정부, 구조된 북한 선원 3명 판문점 통해 송환(4/6, 연합뉴스)**
  - 정부는 전남 여수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한 몽골 국적 화물선에 탄 북한 선원 가운데 구조된 3명과 시신 2구를 6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선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께 판문점에서 도보로 북측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을 직접 건너갔고, 시신 2구와 유품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송환이 이뤄졌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나포·송환'에 대해 "강압적 나포, 무지막지한 강패행위"라고 왜곡 주장 반박 및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낼 것" 등 위협 지속(3.31,평양방송)

-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3.24, 네덜란드) 연설에서 '북핵 폐기 강조'에 대해 "전조선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있어도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 비핵화를 실현하라고 해야 한다"고 실명거론 비난 지속(3.31,평양방송)

'NLL 침범 北어선 구조·송환' 관련 '강압적 폭행·나포'를 재차 주장하며 '괴뢰 해군 강패무리들이 저지른 치 떨리는 만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4.1,평양방송)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이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다'며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발언과 드레스덴 대북 제안, 쌍용훈련,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해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다시금 대결과 전쟁위기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4.4,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쌍용훈련 강행과 언론공개는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원수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격멸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4.4,중앙통신·노동신문)

유엔 인권이사회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北)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추후도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4.5,중앙통신·노동신문)

'미국은 민족분열의 원흉, 반통일 괴수,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며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짓부수고 통일위업 실현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반미투쟁' 선동(4.5,중앙통신·노동신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韓美日 6자수석 내주 워싱턴 회동…北도발 대처 논의(4/3, 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7일 워싱턴D.C에서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거론하고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동대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 발생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추가도발 자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임.
  
- **中관영언론 "北 '핵무기는 모든 것'이란 생각은 환상"(4/4, 연합뉴스)**
  - 중국의 환구시보는 3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하면 모든 것을 갖는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겁먹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음.
  - 이어 "핵무기를 전략적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 세상에 '핵 억지력'은 존재하지만 '핵 공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뜻을 이를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음.
  - 또한 "핵실험을 계속 고집할 경우 '국제적 고립', '빈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는데, 중국의 대표적 보수성향의 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번처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향후 중국 당국의 행보가 주목됨.

#### 나. 미·북 관계

- **美 "北행동 위협하고 도발적…고립만 심화"(4/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이 역내 긴장과 스스로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협스러운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
  - 또한 "이번 도발적인 사격은 지난 몇 주간 이어진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위협, 도발적인 성명 등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종류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만 다지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어 "북한을 제외한 5개 6자회담 당사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가능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다. 중북 관계

##### ● 중국, 北 핵실험 경고에 '촉각'...상황관리에 부심(4/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의 상황관리에 부심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을 직접 언급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자제,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
- 또한 한반도 전문가인 라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 연구원은 "새로운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결정하기 전에 주변국의 정치 외교적인 반응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음.

#### 라. 일북 관계

##### ● 日北 정부협상서 납치 재조사·제재 완화 요구(3/31, 연합뉴스)

- 이하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달 30일과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식 협상을 마친 후 앞으로 '납치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납치문제 관련 재조사, 경제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관계 진전 가능성을 남겼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납치 피해자 안부에 관한 재조사와 피해자의 전원 귀국을 요구했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척하지 않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 유감표명과 자숙을 촉구했음.
- 반면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와 일제 강점을 둘러싼 '과거 청산'을 의제로 꺼냈고 특히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시행 중인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일본 입국 제한 등 각종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

##### ●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계획 일본에 비공식 통지(4/5, 연합뉴스)

-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이달 17일까지 동해에서 해상 포격과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할 예정이라는 뜻을 지난달 열린 일북 정부간 협의과정에서 일본 측에 비공식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보도했음.



-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계획을 일본에 비공식 통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북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탄도 미사일 요격 태세를 지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3일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 대비 태세를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까지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앞서 아베 내각은 작년 4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지스함 2척을 투입한 바 있음.

#### 마. 러북 관계

##### ● 러시아, 서해상 남북 포격 사건에 우려 표명(3/31, 연합뉴스)

-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러시아는 외무부 웹사이트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평을 게재, 서해상에서 남북한이 서로 포 사격을 벌이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쌍방 모두에 자제를 호소했음.
- 또한 "한반도 지역 정세의 주기적 악화가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이는 한반도 정세 악화의 일차적 책임이 한미 양국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러시아가 한미 군사훈련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임.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KF-X) 상반기 중 입찰공고'(4/2, 연합뉴스)

- 방위사업청은 2일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었던 KF-X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엔진 수를 포함한 개발형상과 총사업비, 체계개발기본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음.
- 이는 KF-X의 개발업체로 유력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출 가능성을 이유로 단발 엔진을 선호한 반면 공군은 무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쌍발 엔진을 선호하며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비교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임.
- 한편 방사청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미국 정부와의 가격 및 기술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록히드마틴이 최근 F-35A의 대당 가격이 2019년이면 기존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자료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美 전작권전환 재연기 가다..."적절 전환시기 협의"(4/4, 연합뉴스)**
  - 북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일(현지시간)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한미 양국이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17일부터 열리는 '3자 안보협의(DTT)'에 앞서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협력이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음.

#### 나. 한중 관계

- **중국, 한국의 이어도 포함 해양조사에 '경계심'(4/1, 연합뉴스)**
  - 중국 환구시보와 관영 매체인 신화망 그리고 홍콩 매체인 봉황망은 지난달 31일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이 한일 간 영토분쟁이 있는 독도와 한중 간 해역 관할에 이견을 보이는 이어도를 포함한 해양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했음.
  - 이들 보도는 한국의 해양조사에 대한 시각,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어도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에 있는 점을 의식해 경계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됨.
  - 앞서 환구시보는 한국이 각종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해양주권 장악을 위한 '묘수'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해 주변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음.

####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무기수출금지 정책폐기' 영향 촉각(4/1, 연합뉴스)**
  - 정부는 1일 발표된 일본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완화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아베 내각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행보와 맞닿아 있다고 말하며 무기수출금지 정책의 폐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음.
  - 일본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對) 중국 포위전략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중국을 자극,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음.
  - 외교부는 "일본이 공언해온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



며 아울러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일본 외교청서 '국제법 의거해 독도 분쟁 해결'(4/4, 연합뉴스)

- 일본은 4일 각의에서 통과된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제법에 의거한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외교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으며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부, 日교과서 도발 규탄... "아베, 약속 저버리는것"(4/5, 연합뉴스)

- 정부는 4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에 항의하면서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이날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음.
-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가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은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음.
- 교육부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체계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한중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연구 그리고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대표단의 중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 라. 마중 관계

#### ● 미국, 中해군 주취 국제 관함식 보이콧(4/2,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일 중국이 이달 말 칭다오에서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미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했음.
- 중국 해군은 창설 65주년을 기념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움' 행사에 맞춰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데, 심포지움 참가국 약 20개국 중 유일하게 일본 함정만 초청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불참은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중국이 자위대 함정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 위다오<釣魚島>) 열도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 대응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 러셀 '중지도부, 北비핵화가 국가안보이해 부합 결론'(4/2,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비핵화는 "자국의 국가 안보이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며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어 전략에 변화를 주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
- 이는 아·태 지역에서 핵심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불편하다면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중국이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려는 뜻으로 풀이됨.

● 미국무 동아태 차관보 "러 제재, 中에 위축효과 줘야"(4/4,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3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크림 합병을 단행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제재 조치가 아시아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중국에도 위축 효과를 줘야 한다고 밝혔음.
- 그는 현재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선례로 삼아 무력으로 영토적 이익을 달성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동맹국을 지지하고 동맹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할 것"이라고도 밝혔음.

마. 마일 관계

● 美 '2박3일 국민방문'으로 재조정...日, '선물'줬나(4/3, 연합뉴스)

-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1박2일씩 '균등하게' 잡힐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본 방문일정이 일본의 집요한 설득 노력으로 인해 하루 늘어나 '2박3일'로 최종 확정됐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 일본은 18년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민방문 의미와 상징성을 살리려면 1박2일 일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이며 주목할 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미국 측에 모종의 '선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음.
-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도 1박2일로 예정이 됐었으나 한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과 동일한 2박3일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에서는 최근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문제와 저작권 전환 재연기, 한·미 원자력협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日사사키와 재단 이사장에 블레어 전 미국국가정보국장(4/3, 연합뉴스)**
  -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일 일본의 사사키와 평화재단이 테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새 이사장으로 영입했다고 전했다.
  - 태평양군사령관 출신으로 최근에는 오바마 정부 초기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국장을 역임한 블레어 전 국장의 영입은 최근 일본이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펼치는 '공공정책 업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해석됨.
  - 앞서 일본은 지난달 미국 하원의원 62명으로 구성된 '저팬 코커스'를 창립,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대비한 것으로 과거 군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서 일본 측의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 더 많이 반영되게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미국무부 "日 무기수출 금지 정책 폐지 환영"(4/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일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한 데 대해 "미국은 방산장비 수출과 관련한 일본의 정책 개정을 환영하며 미국 및 다른 파트너 국가와의 방산 협력 기회를 넓혀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이라는 뜻을 밝혔음.
  -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방위산업 및 절차의 현대화를 통해 21세기 세계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음.
  - 앞서 일본 정부는 무기 관련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하면서 기존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 대신 수출 확대를 통해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국제 공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음.

바. 미·러 관계

- **미·러 외교, 우크라이나 사태 외교적 해결 필요성 합의(3/31,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이견을 노출했음.
  - 케리 장관은 "사태의 진정한 진전에는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철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결정도 우크라이나 합법정부 없이 내려질 수 없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연방제의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인의 권리 신장과 무장세력 및 선동가들의 무장해제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기로 케리 장관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美 "흑해에 군함 파견 고려"…나토군 강화해 러시아 견제(4/2, 연합뉴스)**
  - AP통신은 1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크림 사태 이후 러시아 견제에 나선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을 강화하기 위해 흑해에 군함을 파견하고 유럽 주둔병력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미국이 자국 병력을 보태 나토군 강화를 시사한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동유럽 동맹국에 군사력 증강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나토의 발표와 같은 맥락임.
  - 나토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러시아와의 모든 군사,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과거 소비에트연방 소속 동유럽 국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동맹국이 침략위협을 받을 때 억지력과 집단적 방위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 중일 관계

- **중국, '日 무기수출금지정책 폐지에 "고도로 주시"(4/1, 연합뉴스)**
  - 홍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안보영역에서의 정책은 지역의 안전 환경과 전략적 안정 그리고 일본의 국가 발전 방향과 관련된다"고 말하며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한 데 대해 "우리는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국가들의 유관 문제에 대한 고도의 우려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과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고 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무기수출 대국인 중국은 무기수출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관련 정책에서 줄곧 책임자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문제는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관련 정책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음.
- **중국, "중·일간 실력대항에 대비해야"〈中환구시보〉(4/2, 연합뉴스)**
  - 중국의 환구시보는 2일 '일본의 무기수출 확대는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설에서 "무기수출 제한을 푼 것은 전후 법률상태(질서)를 벗어나는 아베 정부의 흉악한 한 수"라고 말하며 '동아시아의 문제유발자', '아시아 평화안정의 도전국'이라고 맹비난했음.
  -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이미 대화능력이 없으며 쌍방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역량(힘)을 갖고 이야기하게 하자"면서 "중국은 중·일 관계가 한층 더 실력대항으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구시보는 중국 관영매체 중에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 신문으로,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종종 강경한 논조를 보여 왔음.



- **中, "아베 야스쿠니행 중단약속을 정상회담 조건으로"(4/3,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3일 중국 정부가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참배 중단 약속을 중일 정상회담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한동안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본이 인정할 것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해왔지만 작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대일 공세의 주(主) 전장을 '영토'에서 '역사'로 바꾼 양상임.
  -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는 아베 정권과 지지층을 잇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 참배 중단을 명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로 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보임.

아. 일러 관계

- **일본 정부, 기시다 외무상 방러 계획 취소(4/2,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에 대한, 러시아 고립화에 나선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4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취소키로 했다고 2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G8 외무장관 회담에 맞춰 일러 외무장관이 회동할 계획이었으나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독자적인 대화 노선은 (미국과 유럽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 기타

- **EU-미국, 유럽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4/3, 연합뉴스)**
  - 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미국 에너지협력위원회 회의는 유럽의 에너지 공급선을 다각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독립 확보를 위해 EU와 미국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 문제가 부각되면서 EU는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이에 미국은 유럽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기로 결정했음.
  -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러시아의 보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지난달 EU-미국 FTA 4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에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日 무기수출 新원칙 뭘 담았나... '수출 가능' 특징(4/1, 연합뉴스)**
  - 아베 내각이 1일 각의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무기수출을 금지한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과는 반대로 일정한 심사 등을 거쳐 조건만 충족되면 무기 및 관련 기술을 폭넓게 수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임.
  - 1967년 도입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으며 1976년에는 기존 대상국 이외의 나라에도 "수출을 삼간다"고 표방함으로써 일본의 무기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음.
  - 이번 新원칙에는 종래의 수출금지 대상국에서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무기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무기수출 허용 조건으로 평화공헌, 국제협력의 적극적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명시했음.
  - 한편,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에 올해까지 4년 연속 국방비 '두 자릿수 증액'을 한 중국은 이제까지보다 더한 '물량투입'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며 아울러 한국 역시 동북아 군비경쟁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적대정책 산물"(3/31,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함.
  -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정치협잡꾼들의 집단인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채택된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면 반대, 배격한다"고 주장함.
  - 특히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악탈의 과거사를 은폐하고 '인권재판관' 행사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일본의 반인류 범죄, EU에서 만연하는 인종차별 등부터 국제적인 형사재판 기관에 회부해야 한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또 미국과 '추종세력'이 벌이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이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사상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며 국제인권 분야에서 지닌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 중국 접경 세관들 동시 검열(3/3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중국 접경지역의 세관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검열단을 투입해 동시에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신의주의 한 주민소식통은 "중국과의 접경지역 모든 세관에 국방위원회와 보위부의 합동검열이 이달 초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당초 이 검열은 3월 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전날까지 연장되었다"고 덧붙였다.
  - 이 소식통은 잦은 세관검열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한 달이 넘게 진행된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더욱이 특이한 점은 국경 지역 세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날한시에 한꺼번에 검열대가 들이닥친 것"이라고 지적함.
  - 이 같은 세관 검열로 인하여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상품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결과 북한 장마당들이 활기를 잃었으며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장마당 상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형편은 비단 국경도시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륙 지방의 장마당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며, 북한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 변경도시의 상인들도 장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은 주로 북한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점들이 갑작스런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보따리(개인) 무역업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북한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중국 무역업자들도 북한 대방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들을 북한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 애태우고 있는 형편임.

● 북 구제역 단속초소 뇌물 수수 만연(3/31,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월 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남한과 인접한 비무장지대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처럼 빠르게 퍼진 이유는 약품 부족과 함께 차량단속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정통한 북한 소식통은 "발병지역에서 차단되어야 할 수족병이 지금은 황해남도 해안 지역과 산간지대까지 퍼졌다"면서 "예방약 부족과 유동인원 통제가 제대로 안 돼 이 같은 위기가 초래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달함.
- 소식통은 구제역 예방 백신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방역초소에서 뇌물을 받고 장사 차량들을 무단 통과시킨 결과 두 달도 못되어 황해도 전역과 강원도 일대까지 퍼졌다고 주장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초에 인민보안부와 수의방역기관, 각도 시군 인민위원회를 망라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해 감염지역을 지나가는 차량을 일체 막고, 감염지역 주민에 대한 여행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물리적인 봉쇄에 집중함.
- 하지만, 평양시와 황해도를 잇는 도로 봉쇄를 맡은 중화 방역초소와 평안남도 도로를 봉쇄하는 마장 방역 초소 등에서는 야밤을 이용해 장사 차량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며, "특히 중화초소에서는 중앙당 연락소 차량 소지자들과 보초병 사이에 시비가 붙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 단속을 맡은 인민보안부 초소원들도 '최고사령관 명령' 관철이라는 명분으로 들락거리는 대남공작기관 차량들과 중앙기관 차량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임.
- 또한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은 장마당에서 한 대당 25만원(30달러)까지 뛰어 올라 돼지가 감염되면 즉각 폐사된다고 전했다.
- 아직 함경도 지역까지 감염됐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제역은 공기 따라 전염되기 때문에 3년 전과 같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음.

● "北당국, 私事여행자에 中내 탈북자 행방 추적 지시"(4/1,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최근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에 나가는 사사(私事)여행자들에게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행방을 추적해 신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성과를 낸 주민에게는 사시여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식으로 사시여행자들을 독려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탈북은 조국을 배신한 행위'로 탈북자들을 끝까지 추적·색출해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 주민들이 탈북을 하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중국 내 탈북자 체포 작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친척방문자들에게 기존의 숙제(비자발급 과정에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쌀, 기름, 현금 등을 바치는 것)로 내주던 경제과제 외에 중국 내 탈북자들을 추적하여 보고할 데 대한 과제를 하나 더 주고 있다"고 전했음.
  - 이 소식통은 중국 내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물론 친척방문으로 나갔다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시여행자에 대해서도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함.
  -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데, 소식통은 "주민들은 '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죽하면 가족과 떨어져 남의 땅에 숨어 돈 벌겠는가'라면서 지시를 비웃는다"고 전했음.
  - 당국의 지시가 입소문을 통해 확산되면서 현재 중국 내에 탈북자를 둔 가족들은 물론 사시여행으로 나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북에 남은 가족들은 안면이 있는 중국 지인들을 통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행방을 파악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임.
- **러, 북 노동자 불법 집단 수용 적발(4/1,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아무르주 건설 현장에 파견돼 일하던 북한 노동자 146명이 생활에 부적합한 불법 주거시설에 집단 수용돼 있던 사실이 러시아 사법 당국에 적발됨.
    - 러시아 아무르주 검찰청은 1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뒤 법에 정해진 주거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이민법 위반)로 '부레야게스트트로이'사에 벌금 40만 루블(12만 달러)을 부과했다고 밝혔.
    - 러시아 당국은 벌금 부과와 별도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적법한 주거 시설 제공을 명령했으며 현재 해당 건설업체가 주거지를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 조사결과 이 건설업체는 러시아 법에 명시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적법한 주거 환경 대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복합건물에 북한 노동자를 대거 수용 중이었음.
    -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지 주목되고 있음.
  - **"북한, 올해도 인도주의 감시 대상국"(4/1, 자유아시아방송)**
    -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1일 '세계 위기 상황 보고서'를 내고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만연한 인권 유



- 린 상황을 주요 이유로 3년째 북한을 전 세계 나라들 중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해 특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특별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함.
- '특별감시대상국'은 인도주의적 위기 정도가 높아, 다른 인도주의 지원 요청국들보다 우선적으로 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나라를 의미함.
- 전세계 국가의 인권, 식량 위기, 자연 재해 등 인도주의 상황을 파악하는 ACAPS는 북한의 곡물 수확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전함.
- 또한 최근 국제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이 여건만 갖춰진다면 곡물을 자급자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인용하면서도, 이 사실이 북한의 식량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함.

#### ● 북, 무역일꾼들에 비료 강제할당(4/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화벌이 일꾼들에 일정량의 비료와 비닐박막을 구입해 보내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 북한은 이미 금년 2월에 중국주재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비료 구입자금으로 1인당 2~3천 달러씩을 강제로 할당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1인당 비료 100톤과 농사용 비닐 박막 30톤을 현물로 구입해 본국에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함.
- 중국소식통을 통해서 알아본 중국의 비료 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싼 곳이 요소비료 1톤에 1,600위안 정도로 100톤이면 16만 위안, 미화로 2만5,000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무역 주재원들의 1인당 연간 사업 할당액이 3만~5만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할당된 비료, 비닐박막 과제가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의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이달(4월)에는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생일이 있어 무역일꾼들은 상당한 액수의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는 처지인데 비료현물 할당까지 받았으니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북한, 무상의료 혜택 세계적으로 드문 일(4/3, 데일리NK)

-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북한의 무상의료에 대해 선전하며 인민보건법에 대해 소개했음.
- 매체는 이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인민보건법'이라는 기사에서 "우리 조국에서는 근로인민 모두가 사회주의 보건시책 아래 무상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인민보건법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채택될 수 있는 인민사랑의 법령이다"고 주장함.
- 이어 인민보건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철저히 집행되고 있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과시되었다고 전함.
- 그러나 이 같은 선전과 달리 북한의 의료체계는 1990년대 중반 체제 난



과 경제난으로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의료체계 붕괴를 목도한 탈북자들은 무상의료는커녕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음.

● **北 꽃제비, 고아원서 다시 장마당으로...대체 무슨일?(4/3, 데일리NK)**

- 북한 김정은 지시로 고아원 시설에서 집단생활하고 있던 꽃제비들이 장마당이나 역전 등에서 구걸하며 생활할 때보다 육체적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고아원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강도 소식통은 "원수님(김정은) 지시로 지난해 장마당과 역전 등에서 빌어먹으면서 지내던 꽃제비들을 해산시 성후동에 위치한 고아원에 모두 집결시키고 도(道)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도망친 아이들 대부분은 12살 이상의 아이들로 강도 높은 노동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탈출한 것"이라고 말함.
- 소식통에 따르면 고아원에서는 12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화목과제'는 물론 직원들 가정의 일거리도 시켜 고된 노동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일부 꽃제비들이 탈출했으며, 일부는 민가에 나타나 구걸을 하거나 도적질 등을 하며 소동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음.
- 꽃제비들은 주민들에게 '장마당서 빌어먹을 때보다 더 배고프다며'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어도 강도 높게 시키는 일을 하고 나면 걸을 힘도 없다고 배고픔을 호소하며, '고아원이 아니라 노동 단련대'라고 비유하며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소식통은 "겨울 동안 (고아원) 직원들의 화목마련으로 지친 아이들은 '농사철이 오기 전에 고아원에서 나가는 것이 살길'이라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오히려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을 때가 더 편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北차석대사 "미사일·인권 압박 계속하면 새 핵실험"(4/5, 연합뉴스)**

-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이 미사일과 인권 문제로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리 차석대사는 이날 낮 유엔본부에서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붉은 선'을 그었는데, 미국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선을 넘어서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주장했음.
- 그는 '붉은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자 "더이상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답변했음.
- 리 차석대사는 "핵과 인권문제를 내세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미사일·비핵화, 인권 문제를 수단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의 목표"라면서 "미국이 붉은 선을 넘어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 운운하며 갈수록 심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앞장서온 사람이 바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만큼 킹 특사의 북한 방문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발언함.

### ● "BBC, 북한에 '텔레토비' 프로그램 공급 추진"(4/6, 연합뉴스)

- 북한이 '텔레토비'와 '닥터 후' 등 영국 BBC 간판 프로그램의 북한 내 방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와 공영방송 BBC는 대북 개방유도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자국 TV 콘텐츠 공급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텔레토비를 비롯한 3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남.
- BBC는 지난해 대북 콘텐츠 공급 프로젝트에 착수해 북한이 반감 없이 받아들일 만한 콘텐츠를 선별해 외무부를 통해 북한 측에 공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측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최근 텔레토비 등 3개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반응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됨.
- 프로그램 공급 협상은 영국 외무부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협상팀 사이에 진행됐으며 평양주재 영국 대사관도 양측 관계자 접촉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의 대북 TV 콘텐츠 공급 계획은 현지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취지에서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으나, 협상 경과가 아직 초기적인 수준이어서 BBC 프로그램의 북한TV 방영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BBC는 북한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안과 관련된 내용은 최종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 2. 북한인권

### ● CSW, 북 인권 개선 '행동' 촉구(3/31,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따라 영국 BBC 한국어 방송 개시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함.
-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Ben Rogers) 동아시아팀장은 지난 29일 런던에서 열린 이 단체의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회의(Pursue Justice 2014: Speaking out for religious freedom)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단체의 매튜 존스(Matthew Jones) 공보담당은 2007년부터 이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할 만큼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주



목했으며, 조사위원회 권고 내용 중 책임자 처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을 비롯한 그의 역량강화 협력, 북한인권 증거수집 활동과 문서화를 위한 새로운 기구 설치 필요성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고 전함.

- 로저스 팀장은 특히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한국어방송을 개시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영국 정부의 협조를 부탁했음.

### ● 황우여 "입법 제대로 못하면 野새정치는 정쟁 불과"(3/31,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입법 과제를 설명하면서 "대북 정책은 국론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북한지원법 등을 정비하는데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음.

### ● 대한변협, 2013 인권보고서 발간(3/31, 법률저널)

-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정책의 주요 지표가 될 2013 인권보고서를 발간함.
- 대한변협이 발간한 이번 2013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3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을 주제를 다루고 있음.
- 특집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입법 ▲의료 인권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 인권을 수록하고 있음.

### ● 외교원 北 인권토론회, 北 도발 기름 부을까?(3/31, 아시아경제)

- 외교부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다음달 3일 국립외교원에서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활동을 통해 본 북한의 인권상황 및 대응방안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N COI Activities & Implications)'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형식의 공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임.
- 이번 공개 토론회(IFANS Debate)에서는 UN COI가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 내용과 향후 북한인권 논의의 전망,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 전반을 놓고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임.
- 특히 IFANS Debate 전 내용은 녹화돼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만큼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됨.

### ● 킹 美북한인권특사 내주초 방한...北인권 등 논의(4/1,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4월 2~10일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 그는 한·일 양국 당국자들과 만나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내용과 후속 대책, 북한에 1년 이상 갇혀 있는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 석방, 북한과 일본 정부 간 진행 중인 일본인 납치자 협상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무부는 킹 특사가 내달 3~4일 도쿄에서 외무성 고위 관료 및 내각부 납치문제담당장 등과 만나 북한 인권 및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최근 이슈 등을 논의하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면담하고, 이어 7~9일 서울에 머물면서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국회 고위 관계자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남북주재 英대사들 "북, '드레스덴 선언' 위협으로 받아들여"(4/1, 뉴시스)**

- 스코트 화이트먼 주한 영국대사 및 마이크 기퍼트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통일경제교실'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을)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기퍼트 대사는 또한 영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지지한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 **최경환 "선진화법 보완...특별감찰관 감찰대상 확대"(4/1, 연합뉴스)**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함.
- 특히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량, 의료 등 인권차원의 지원을 담는 것에 협상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함.

● **한변, "UN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엄중한 인류양심의 표명"(4/1, 코나스넷)**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3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 성명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경의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게 될 현장기반조직을 태국이나 한국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직을 유치하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음.





- **미 국무부 '북한 초청하면 킹 특사 파견할 것'(4/2, 미국의 소리)**
  - 미국은 북한이 초청할 경우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파견해 현지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힘.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 정레브리핑에서 미국의 킹 특사 방북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케네스 배 씨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북한이 초청한다면 킹 특사가 기꺼이 방북할 것이고 북한이 앞서 킹 특사 초청을 두 번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음.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다음주 일본 방문(4/4, 미국의 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는 3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 주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함.
  - 인권이사회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문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 활동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도쿄 방문 중 일본 외무상, 납치문제 담당상, 피해자 가족,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로 논의할 예정임.
  
- **안보리, 17일 북 인권 논의 비공식 회의(4/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3국 대표의 제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7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임.
  -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오는 17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아리아 방식'(Arria-Formula)의 비공식 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지는 문제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이사국이 제안함.
  - 북한인권위원회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공동의장은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공동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면서 유엔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토론하게 되는 첫단계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코헨 공동의장은 17일 비공식 회의는 커비 위원장이 유엔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관해 주로 발표하고, 몇몇 외부 연사가 짧게 증언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평통 대만지회, 11일부터 北 인권 실태 사진전(4/5, 연합뉴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대만지회는 11일부터 열흘간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 도심에 있는 코리아 플라자에서 '북한 인권 실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특별 사진전을 개최함.

- 전시회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담은 사진과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비참한 생활상을 묘사한 그림 등 60여 점이 선보일 예정임.
- 대만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전시회가 열리기는 처음임.
- 황희재 민주평통 대만지회장은 "대만의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시민, 젊은이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한국인 교민사회와 후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밝힘.

### ●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 오늘 방한(4/5,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저녁 방한함.
- 킹 특사는 10일까지 계속될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인사,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및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대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3. 탈북자

### ● "국내 탈북자, 외래어.北사투리 편견 가장 힘들어해"(4/1, 연합뉴스)

- 통일부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최근 10년 동안 입국한 20~60세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탈북자들은 '외래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41.4%, 115명)를 가장 많이 꼽았음.
- 그 다음으로는 '북한 사투리에 대한 남한사회 편견'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3%(64명)를 차지했고, '과다한 자녀 교육비 지출'(12.9%), '자녀의 학교 부적응'(8.6%), '경제활동 및 생계유지'(8.3%) 등이 뒤를 이음.
- 외래어 의사소통 문제는 정착 3년 이하 탈북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46.1%) 나타났지만,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점차 완화(정착 7년 이상 32.3%) 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러나 북한 사투리에 대한 편견이 어렵다는 응답은 정착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3년 이하 21.6%→7년 이상 27.4%)을 보였음.
- 보고서는 응답자들은 가장 듣고 싶은 문화 강좌로 '언어'(24.4%)를 꼽아 탈북자의 남한정착에서 언어 적응에 관한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으며, 남한 문화 적응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남한 사람과의 교류회 개최'(40.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통일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탈북자를 위한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하고,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 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대한주택보증, 탈북자 직업훈련 기부금 1억 전달(4/1, 뉴시스)**
  -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옥임)과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1일 오후 재단 소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착한(着韓)'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함.
  - 이번에 전달된 착한 기부금은 탈북청소년이 24시간 생활하는 그룹홈과 공부방의 열악한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조무사양성' 훈련과정 등에 지원될 예정임.
  
- **'간첩사건 증언' 탈북자 "비공개 증언 北유출" 주장(4/1, 연합뉴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법정 증언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자신의 신분이 북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 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 A씨는 탄원서에서 "북한에 있는 딸이 올해 1월 3일 보위부 반탐과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켰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공개로 신명이 보장된다고 해서 출석한 것인데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알고 내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며 "증언 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주장했다.
  -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실제 북한에 A씨의 신원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열람 등사를 허용해 줬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문건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권영세 "中 탈북자 처리, 변화 있지만 만족스럽진 않아"(4/2, 뉴스1)**
  - '2014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차 일시 귀국한 권영세 주중 대사는 2일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내법적 차원과 북한과의 조약 등 국제법적 차원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조약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태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서도 "아직도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힘.
  - 최근 한중 간 협력관계가 강해지며 중국 내 탈북자 처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다소 유연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원칙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 **캐나다, 탈북 난민 심사 대폭 강화(4/2, 미국의 소리)**
  -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특히 한국 국



- 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고 난민 신청을 했던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될 위기에 처함.
- 지난 2010년 봄 한국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 김미연 씨는 난민으로서 북한에 대한 자료와 물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안에 항소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함.
  - 김 씨는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캐나다 내 탈북민들의 난민 신청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 실제로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캐나다는 탈북민 2백57명을 심사해 21명 만을 난민으로 인정해, 2011년에 170명을 심사해 117명을 받아들였고, 2012년엔 290건을 심사해 230여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승인율이 약 80%에 달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상황임.
  - 캐나다 토론토한인회 이진수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 캐나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2013년 5월31일부터 적용됨.
  - 캐나다 정부는 지난 해 말 한국 정부에 탈북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의 한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함.
  - 실제로 지난 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 김민서 씨 가족이 연방정부의 항소로 난민 자격을 잃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은 지난 해 3월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지 한 달만인 4월에 난민 자격을 받았으나 캐나다 연방이민국은 김 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난민항소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임.
- 3월 탈북 난민 2명 미국 입국...2006년 이후 166명(4/3,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가 1일 발표한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서 지난 3월에 탈북 난민 2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혀,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66명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70-80%는 여성임.
  - 탈북 난민들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 동포들, 북한 난민 추방 막기 서명운동(4/4, 연합뉴스)**

- 온타리오한인교회협의회와 토론토한인회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의 추방을 중단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두 단체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2천여 명을 헤아리던 탈북자는 최근 연방 정부가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들어온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정책을 강화하는 바람에 600여 명이 남은 상태로, 이들은 현재 언제 추방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지내는 것으로 전해짐.
- 캐나다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재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4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가 하면 상당수가 한국행을 거부한 채 제3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설명임.
- 온타리오한인교회협의회와 토론토한인회는 "어떤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건 아무 대책 없이 탈북자들이 추방당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스티븐 하퍼 총리와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장관에게 진정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3일(현지시간) 현재 4천 명이 넘는 한인이 진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30대 탈북자, 10대 의붓딸 상대로 욕정 채우다(4/6, 국민일보)**

- 탈북자인 30대 아버지가 두 명의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자신을 고소한 큰 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들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해 중형은 면했음.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힘.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음.
-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함.
-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해 생활하다가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2)을 성추행했음.
- 또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뒤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큰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됨.

● **'간첩사건' 논란속 첫 공개...합동신문센터 가보니(4/6, 연합뉴스)**

- 국정원이 운영하는 탈북민 수용 시설인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합신센터가 지난 4일 언론에 처음 공개됨.



- 2008년 개관 이후 비(非)보도를 전제로 기자단 대상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32개의 언론매체 기자들을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음.
- 국정원은 이날 공개 행사에서 그간 언론과 시민단체의 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졌던 합선센터에 대한 정보가 실상과 다르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음.
- 안내에 따라 방문한 곳은 수용 탈북민이 조사 중 기거하는 독방을 비롯해 기초 조사가 진행되는 1인 조사실, 추가 의혹이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사를 하는 합동조사실, 전염병을 앓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격리 조사실, 의무실, 도서실, 어린이 놀이방 등임.
- 조사실에서는 탈북자 한 명당 하루 평균 5~6시간의 신문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 내용을 녹화해 2~3개월간 보관한다고 덧붙임.
- 시민단체들은 합선센터가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고, 장기간 인신구속과 변호인 접견불허 등으로 인해 탈북민의 인권이 침해되는데도 어떠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해왔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공개 행사는 국정원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정원 의도에 따라 진술할 수밖에 없는 수용 탈북자의 인터뷰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국정원은 마치 합선센터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CCTV를 통한 조사실 모니터와 녹화 등과 관련된 원칙과 지침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10명 중 3명 상봉 후유증... "불면증·허탈감" (3/31, 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는 이달 20~27일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 4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상봉 후 건강 및 심리상태에 대해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0명(응답률 52%) 가운데 62명(27%)이 '상봉 후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힘.
  -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람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움으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한 사람이 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허탈감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17명), '북한의 가족사진만 보게 된다'(14명), '꿈에서도 나타난다'(6명)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상봉 후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자도 122명(44.3%)이나 됐는데, 그 이유





- (복수응답)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점'(63명), '생각·이념 차이 등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실망'(20명), '북의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15명), '체력 소모로 인한 건강 악화'(14명) 등이 꼽혔음.
- 이에 따라 현재 심정(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상봉 때 기뻐지만, 지금은 답답하고 허탈하다'(83명),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나를 편했다'(20명)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왔고 '상봉 때 기쁨이 여전하다'고 한 응답자는 127명이었으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사람은 30명에 불과했음.
  - 상봉행사 개선점(복수응답)으로는 '상봉시간을 늘려야 한다'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봉 시간을 구분하지 말고 상봉 기간 계속 같이 있게 해줘야 한다'(91명), '금강산이 아닌 서울과 평양 등에서 개최'(47명), '상봉행사 확대'(43명) 등이 뒤를 이었음.
  - 이산가족 문제 해결(복수응답)을 위한 선결 과제로는 '편지 교환 제도화'(119명), '상봉 정례화'(114명), '화상상봉 제도화'(43명), '전체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50명) 등이 꼽혔음.
  - 대한적십자사는 적지 않은 이산가족들이 상봉 후유증을 앓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내달부터 이산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며, 우선 적십자 봉사원과 직원, 심리사회적 지지 강사들이 희망자 49명을 직접 방문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줄 계획임.

## 5. 남북자

### ●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 이틀째 일정 돌입(3/31,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3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정부 간 공식 협상의 이틀째 일정에 돌입했음.
- 일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국민 납북자 송환과 납치 문제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은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시행 중인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 교도통신은 전날 협상과 관련, 일본 정부가 북한이 2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항의하고 납치 문제를 의제로 제안했으나 이에 관한 북한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함.
- 통신은 또 일본 정부가 회담에서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안부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일본은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짐.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최근 도발에 항의하는 한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으면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비치



는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구사했다고 평가했음.

- **북·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회담 개최 합의(3/31, 미국의 소리)**
  - 북한과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회담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과 일본이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에 걸친 국장급 정부 당국자 회담을 마칩.
  - 지난 2012년 말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음.
  - 이하라 국장은 31일 회담이 끝난 뒤 북-일 두 나라가 앞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지적함.
  - 그러나 납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북-일 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납북 메구미 부친 "방북 요청받아...당장은 어렵다"(4/2, 연합뉴스)**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아버지 시게루(滋·81)씨가 지난달 몽골에서 외손녀 김은경 씨를 면회했을 때 다음 달에 예정된 김씨 딸의 생일에 맞춰 방북해달라는 제안을 북측으로부터 받았다고 2일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에서 밝힘.
  - 그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머지않아 이쪽에서 북한에 가기도 하고 은경이를 일본에 초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早紀江·78)씨는 "은경이에게는 납치 피해자가 전원 귀국하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해 제대로 교류가 가능해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고 언급했음.
  
- **"北日 외교당국 금명간 비밀 접촉 가능성"(4/5,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북한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가 곧 중국에서 비밀 접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접촉 상황에 밝은 관계자는 "교섭에는 비밀로 할 부분도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음.
  - 신문은 접촉이 이뤄지면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일본 측 인사로 나설 예정이며 북한 측 인사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한교연 남북협력위,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적극 모색(3/31, 크리스천투데이)**
  -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남북교회협력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회의를 열고,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합심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중단 상태에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교단과 협력해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음.
  - 더불어 북한 평양을 방문해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만약 이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 7월 중 '두만강 백두산 통일기도회'를 중국 도문과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 **유엔, 北에 긴급구호기금 650만 달러 지원(4/1, 데일리NK)**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유엔 인구가금, 세계보건기구 등 북한에서 식량과 보건 관련 지원 활동을 하는 유엔의 4개 기구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650만 달러(약 69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OCHA 대변인은 "모금 부진으로 북한에서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구들에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면서 "식량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분야로 지원됐다"고 밝혔음.
  - OCHA은 자체적으로 중앙긴급구호기금을 마련해 자금부족으로 유엔의 인도주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매년 선정해 기금을 할당해왔으며, 북한은 구호자금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수혜국 명단에 포함됐다.
- **캐나다, 미화 270만 달러 대북 식량 지원(4/2, 미국의 소리)**
  - 디르크 슈테젠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1일 캐나다가 지난 31일 27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으며, WFP는 이 자금으로 밀가루와 옥수수를 구입할 예정임.
  - 슈테젠 소장은 이 밀가루와 옥수수가 '수퍼 시리얼'로 불리는 '혼합가공식품' 공장에 보내져 영양식품을 만드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는 별도로 앞서 스위스 정부가 지난 해 12월 보낸 분유 400t과 세



계식량계획이 자체 기금으로 구입한 옥수수 430t이 지난 달 북한에 도착했으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에 대한 '자금부족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WFP에 배정했던 3백25만 달러가 지난 달 WFP에 전달됨.

-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은 여전히 자금 부족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올 3월 WFP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 슈테겐 소장은 3월 중 북한 9개 도 1백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1천600t의 혼합가공식품과 영양과자를 분배했는데, 지원을 받은 주민 수가 평균 1백60만 명에서 1백만 명으로 줄고 지원 식량 규모도 지난 1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 영양과자공장 7곳 가운데 5곳이 가동중단됐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6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슈테겐 소장은 올해 말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에게 영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5천3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 미 NGO, 6년째 북 학교 짓기 지원(4/2, 자유아시아방송)

- 비영리단체인 마이크로프로젝트 재단은 평안남도 양덕군과 강원도의 법동군, 황해남도 재령군의 공사를 끝내면 지난 6년 동안 진행해온 10개 소학교와 중학교 건물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고 밝힘.
- 재단을 세운 크리스토퍼 카펜터 씨는 2008년부터 북한 지원사업을 시작함.
- 재단은 2008년 8월 강원도 법동군 비암마을에 300명 학생의 학생을 수용할 초급중학교 개축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미화 약 37만 달러를 지원해 오래됐거나 자연재해로 무너진 학교건물들을 고치거나 새로 지음.
- 마이크로프로젝트 재단은 지난해 말 끝낼 예정이었던 학교 세 곳의 완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 학교를 짓는데 미화 약 4만 달러가 든다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모금으로 충당해왔다고 밝힘.
- 카펜터 대표는 올해 하반기 북한을 다시 방문해 마이크로프로젝트 재단이 세운 학교들을 돌아본 뒤 북한 당국자와 추가 지원을 논의할 계획임.

#### ● FAO '북한 구제역 방역 40만 달러 지원'(4/3, 미국의 소리)

-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구제역 방역을 위해 미화 4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식량농업기구의 후안 루브로스 수의국 국장은 현재 구제역 감염검사와 방역책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Project proposal)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북한에 방역단을 파견할 예정이고, 미화 40만 달러를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밝힘.
- 방역단은 북한에서 농장 내 안전과 구제역 관련 장비 사용법, 동물 관리



와 표본채취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루브로스 국장은 FAO의 자금 40만 달러는 구제역 퇴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면서 구제역이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악성 가축 전염병인 만큼 '역내 위협'으로 봐야 한다며 주변국가들의 지원을 당부함.
- 이와 관련해 FAO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루브로스 국장은 덧붙임.

#### ● IFRC, 북에 나무 64만 그루 지원(4/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IFRC)가 지난 2일부터 북한 평안남도의 운산군에서 시작해 전국의 산간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 9만 4천 그루의 묘목을 제공했다고 밝힘.
- 이 밖에도 북한 정부에는 55만 그루의 묘목을 지원함.
-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은 10일 간 계속되고, 묘목 심기에는 수 만 명의 북한 농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될 예정임.
- 나무 심기 운동의 주요 목적은 여름에 일어날 수 있는 홍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대규모 홍수로 황폐화된 산악지역에서 산사태와 바다 침식이 자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 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올해 나무 심기 사업이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으나, 올해 추가적으로 묘목과 나무 심기운동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다고 설명함.

#### ● 유니세프 "한국 정부 제안, 대북 모자보건 지원 사업 환영"(4/4, 미국의 소리)

- 유니세프(UNICEF)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독일 방문 중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의 하나로 제안한 대북 '모자패키지 사업 (1000 Days Project)'에 환영의 뜻을 밝힘.
- 케이트 도노바 유니세프 대변인은 3일 "영유아의 건강한 1천 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안을 크게 환영하며 "어린이의 생에서 첫 1천 일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이의 복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함.
- 박 대통령의 제안은 유엔과 협력해 북한 산모와 영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동안 일회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뤄져 온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임.
-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유엔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 美의회조사국 "대북 식량지원, 韓美 정책조화 필요"(4/5, 연합뉴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4일(현지시간)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정책적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함.
- 보고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접근이 항상 조화로웠던 것은 아니다"라며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원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한국과 중국의 조건 없는 대규모 지원에 의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따른 접근권과 모니터링 보장을 요구해온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이어갈지 불확실하다"며 "의회는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식량지원을 북핵과 같은 안보논의와 어떻게 외교적으로 연계시킬 것이냐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식량지원과 안보현안의 연계가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변화를 유발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며 "식량지원을 정치범 석방 등 인권개선과 연계시키는 변형된 접근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음.

## 8. 북한동향

-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나포 및 송환'에 대해 "동족압살 기도의 집중적 발로"라며 "이번 사건을 절대로 스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및 '南 당국의 사죄와 관련자들 처벌'을 주장(3/30, 중앙통신/이것이 인도주의이고 공동번영을 위한 것인가)  
\* 'NLL 월선 北 어선 나포 및 송환' 관련 '강압적 나포'라고 주장하며 "무지막지한 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과 '단호한 실천행동으로 징벌할 것' 등을 다짐하는 각 계층(군관, 연구사, 학생 등)의 반향을 소개(3/30,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3/30), 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진정 인권을 논한다면 미국·일본·EU나라의 반인륜 범죄부터 국제적인 형사재판기관에 회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3/31, 중앙통신)
-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 여성토론회'(3/29, 중국 심양)를 진행하고 '일본군의 성노예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



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공동결의문' 발표(3/30, 중앙통신·중앙방송)

-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 등 訪獨 발언(北 경제난과 어린이의 배고픔 등)을 "만사람을 웃기는 일"이라고 평양시민(안경희) 등 원색 비난(3/31, 중앙통신/사람 웃기는 일을 언제까지 할 셈인가/남조선 집권자의 저급한 외교)

※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 :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한 공동번영 위한 인프라 구축 ·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나포·송환'에 대해 "강압적 나포, 무지막지한 강패행위"라고 왜곡 주장 반복 및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낼 것" 등 위협 지속(3/31, 평양방송/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윤정범(군관)·채무진(사회과학원 연구사)·박창선(학생), '해군2함대를 죽탕쳐버리고 백령도를 통째로 불살라 수장시켜야 한다'고 '복수다짐' 업포(3/31, 중앙통신)

\* 최춘희(여맹 부위원장)·유영식(군관)·김성국(대성지국처장) 및 어로공 등, "백령도를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 등 '對南 적개심' 표출 고조(3/31, 중앙방송)

\* 고능두(국가해사감독국 국장) 등 각계층 노동자·주민들의 "불벼락만 차례질 것, 총대로 결산" 등 '보복 결의' 지속 보도(3/31,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4월1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및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고 소개(4/1, 중앙통신·중앙방송)

- 'NLL 침범 北어선 구조·송환' 관련 '강압적 폭행·나포'를 재차 주장하며 '괴뢰 해군 강패무리들이 저지른 치 떨리는 만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4/1, 평양방송/용납 못할 강패행위)

- 일제의 성노예범죄 진상을 폭로하는 미군문서들 공개 관련 '과거 범죄를 왜곡·부정하고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국주의화·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의 발로'라며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의 극치이며 사무라이적 근성'이라고 비난(4/1,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일본의 따귀를 치는 증거문서)

-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 등에 한국전 당시 가져간 문화재 반환을 주장하는 글들 게재 관련 미국은 '조선봉건왕조의 옥새뿐 아니라 문화재약탈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문화유산들을 반환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4/1,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나포·송환' 관련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행위"라고 지속 비난하고 최성진(조선작가동맹 작가) 등의 "해적 무리들을 징벌의 포화로 씨도 없이 죽탕쳐 버려야 한다"는 반향을 소개(4/2, 중앙통신/인권의 교살자, 패륜의 야만들에게 징벌의 포화를 들뜨우자)
- '제주 4.3사건' 66주년 관련 同 사건을 "애국적인 반미, 반파쇼 인민 항쟁"이라며 현실은 "반미결사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4/3, 평양방송/온 겨레를 반미투쟁으로 부르는 4. 3인민봉기)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